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방안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방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규모 증대와 노인의 특성변화, 특히 베이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방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이러한 계획이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06~'10)의 성과와 한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여 노인인 가족의 요양요구를 해소하여 노인의 요양서비스 수혜율이 2009년 기준 5.0%이며,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

프라 충족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영역을 비롯한 주택·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영역별 다부처의 정책이 개발되었다. 노인 삶의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접근은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노후건강을 위한 평생건강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고령친화적 주택·교통, 다양한 노인의 삶을 풍부하게 할 문화에 대한 지원과 노후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정책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노인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진보하였지만, 취약노인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에 머물러있어, 모든 노인을 아우르는 거시적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정책으로는 미비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노인 여가문화·사회참여·건강관리와 관련한 대다수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요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하여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기존 고령화 정책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¹⁰⁾과 노년기로의 진입⁽²⁰⁾ 등 본격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준비가 매우 취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노인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계획이었으나, 고령사회로 인해 겪게 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요소 해소방안이 부족하였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중고령자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관행의 변화와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의 질에 대한 접근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예방차원의 건강정책과 평생체육정책이 제

시되었으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나친 영역확대라는 지적과 함께 고령사회 정책으로서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여러 사전예방적 정책을 고령층으로 한정하여 정책대상자를 집약함으로써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점을 극복하여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목표의 재설정,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정책관심사의 변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노인친화적 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장체계의 고령친화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패러다임을 노인보건복지 중심의

사후적 지원(취약노인을 국가가 보호)에서 곧 노년기에 접어들 고령층(55세 이상)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자립적·활동적인 노후준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도록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통한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력 제고 및 고령화 정책의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한다.

베이비붐 세대(712만명, 총 인구의 14.6%)는 현 노인세대와 비교해 훨씬 규모가 큰 인구집단

일 뿐만 아니라,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노후에 활발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등 활기찬 노후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경제·사회적 충격으로 작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부터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발전적 변화

표 1. 고령사회부문의 기본방향 설정

구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	개선방향
정책목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시스템의 체질개선
정책 패러다임	사후적 노인복지정책	사전에방적 사회정책
정책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노인 중심	고령자(베이비 부머에 대한 관심), 중산층 노인까지 정책대상 확대
정책관심사	기본생활보장 중심 (기본소득, 건강보장 등 기본육구 충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존엄성 유지와 자아실현 등 상위육구 충족)
정책범위·내용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이 두어졌으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패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정책과 건강보험의 개편에 관한 정책적 관심 부족	건강보장체계의 고령친화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장기요양의 양적 인프라 확보에 초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의 고도화 및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물리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치 미흡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의 구체화(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노인일자리 정책에만 초점을 두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및 고령자의 취업육구의 근본적 해결 미흡	적극적인 고령자 활용방안 모색 (성장동력 분과 자료 참조)
	사회참여·여가문화 프로그램의 낮은 이행도로 인한 낮은 체감도	다각적·보편적인 사회참여서비스 제공
	노후준비에 대한 낮은 정책적 관심으로 인한 구체적인 정책개발 미비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 구축

의 계기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잔여 적 고령정책에서 보편적 고령정책으로 변화, 고령화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대상과 정책관심사를 확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노인 및 고령자(55~64세)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중고령자 및 중산층이상 노인까지 포괄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방향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본육구 총족에서 상위육구 총족으로 정책범위 확대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소득·고용·건강·주거보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를 통하여 존엄성 유지와 자아실현이 가능한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즉,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점검 및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2) 주요내용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화 분야를 위한 정책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추구한 현 노인에 대한 대응만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는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노후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등을 목표로 하여 36개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우리사회의 주축 생산동력이었던 베이비 부머가 퇴직 연령층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이 노후생활에 갖고 있는 중요성과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 및 의료비 절감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소득보장·요양지원만으로는 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충족이 미흡하므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는 기존의 사후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 삶의 완성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회체계 구축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 영위와 사회통합을 제고(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사회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생활기반 확립을 추진하도록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 방안 마련,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을 목표로 30개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의 세부과제

세부영역	과제	세부과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시니어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에이지 캠페인 실시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개인연금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노화 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주: * 중점추진과제

인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공적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를 비롯한 주택·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 등의 노인의

표 3.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의 세부과제

세부영역	과제	세부과제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일자리 사업 체계화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농지연금 도입*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의료비 지출 적정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마련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바우처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주: * 중점추진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부처 공동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개발을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취약노인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에 머물러있고, 노인 여가문화·사회참여·건강관리와 관련한 대다수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요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하여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요양 지원만으로는 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 충족 미흡하므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사후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 삶의 완성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회체계 구축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 영위 가능성을 제고해 가도록 한다.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속적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고령자에 대한 정책 외에도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사회 전 영역이 고령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추구하여 모든 연령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현이 요구된다.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및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12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aging in

place)하기 위해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교통환경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요소이며, 노년기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된 주거환경은 노인이 잔존하는 기능상태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노인 측면에서는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갖추어진 교통환경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노년기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활동적 노후(active aging)의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과 교통 환경의 기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사회내에서 노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총 78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중 중점과제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여개가 제안되었다.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

표 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의 세부과제

세부영역	과제	세부과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강화*
		농촌 가사도우미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노인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주: * 중점추진과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현 노인세대의 삶의 질 제고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현 노인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미래 노인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견된다.

첫째, 정년연장, 계속고용,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하여 베이비 부머 및 현노인층에게 노동기회 확대를 통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산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함으로써 부모부양, 자녀교

육·결혼, 본인의 노후준비 등의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편, 자원봉사 활성화,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및 사회통합 제고를 통하여 소극적인 노후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사회적 통합 저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용 지원,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등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강검진의 확대 및 사후관리 내실화, 영양서비스의 비용효율화를 통하여 급증하는 의료비 및 요양비용 억제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성 제고가 가

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의한 건강, 소득, 일·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준비, 건강검진의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독립성 유지 및 건강수명의 확대, 합리적인 자산관리 및 균형잡힌 노후소득확보 방

안 마련노후준비기반 조성을 통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물리적 환경 및 문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본문**